

민생물가 특별관리  
관계장관 TF (공개)

#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방향

2026. 2. 11.

관 계 부 처 합 동

## I. 추진 배경

### □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.0%이나, 높은 물가수준으로 민생부담

-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.0\*로  
'25.8월 이후 5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

\* 소비자물가(전년비, %): ('25.1Q)2.1 (2Q)2.1 (7)2.1 (8)1.7 (9)2.1 (10)2.4 (11)2.4 (12)2.3 ('26.1)2.0

- 그러나,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\*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,  
먹거리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아\*\* 민생 부담 지속

\* 5년간('21.1월 대비 '26.1월) 상승률(누적, %): (CPI)16.8 (농축수)21.4 (가공식품)24.8 (외식)25.3

\*\* 1월 품목별 물가상승률(전년비, %): (CPI)2.0 (농축수)2.6 (가공식품)2.8 (외식)2.9

### □ 국민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 민생회복의 시작점

- 실생활에서 매일 마주하는 밥상물가가 민생체감의 '바로미터'  
→ 민생회복을 위해 강력한 물가안정 노력 지속 필요

\* 국민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'물가상승' 응답 72%('25.3월, 한경협)

- 특히, 독과점 시장구조를 악용하는 담합·사재기·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법 행위, 비효율적 유통구조 등이 물가안정 저해요인

\* 밀가루·설탕 가격 담합 적발('26.2월) / 농산물 유통비용률 49.2%('24년, aT)

- 기존의 물가안정대책과 차별화해 경쟁제한행위 점검·적발, 시장의 불공정거래 요소 제거 등 근본적 대응을 중점 추진할 시점

⇒ **엄정한 법집행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 제고 + 체감물가 안정과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**

- 경제부총리 주재로 **부처와 법집행기관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특별 TF를 전격 가동해 물가안정에 총력**

## II. 추진 방향

◇ 「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」를 상반기 집중 가동(필요시 연장)

⇒ ① 불공정거래 + ② 정책지원 부정수급 + ③ 유통구조 점검 중점 추진

□ (TF 구성) 재경부·공정위<sup>상시참석</sup> + 품목·분야별 소관 기관장<sup>필요시</sup>

- 경제부총리를 의장, 공정위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두고, 이슈 품목·분야별 소관 기관장(예: 농산물-농식품부장관)이 참석



※ 점검팀은 협조부처 추가, 확대/조정/세부팀 설치 등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

□ (운영) TF(제시) - 점검팀(검토) - TF(발표) 3단계로 운영, 금년 상반기 집중 가동(필요시 연장)하여 성과 창출

- (TF) 불공정거래·유통구조 문제 품목·분야 제시 + 점검팀별 주요 이행과제 제시 ⇒ 점검팀 논의 거쳐 개선방안 마련
- (점검팀) 품목·분야별 문제점 분석 및 세부 대응방안 논의
  - (불공정거래) 담합·경쟁제한 등 독과점적 시장구조 악용, 불공정 거래 등 범정부합동 단속, 기관간 긴밀한 공조 통해 신속 조사 등 추진
  - (부정수급) 할당관세·할인지원·정부비축 등 주요 물가안정 정책의 이행 실태 점검, 부정수급 적발시 즉시 수사의뢰 및 개선방안 마련
  - (유통구조)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유통단계별 실태조사 실시 및 정보공개 확대 등 적극 추진